

■ 아시아 문화수도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추진 내용과 과제

문화·예술 특화 ... 빛고를 전역 '리모델링'

20개 사업 2023년까지 1조5천억 투입 계획

사업비 제때 확보·운영 문제 등 난제 수두룩

오는 9월 '대인시장 예술인공방거리 조성사업' 착수를 계기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광주 전역을 '문화벨트화' 하는 사업이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축으로 광주 5개 구를 문화·예술지구로 특화함으로써 도심 전체를 문화수도로 결맞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2023년까지 모두 1조5천억원이 투입돼 7대 문화권 20여개 주요 사업이 진행되지만 소요 재원이 제 때 투입되지 않을 경우 사업 완료시기가 지연될 우려도 있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7대 문화권은 ▲문화전당권(문화전당·동구) ▲아시아문화교류권(사직·양림동) ▲아시아산과학권(광산구 비아동) ▲아시아전승문화권(남구 대촌·철석동)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무등산·영산강) ▲교육문화권(서구 마북동) ▲시각미디어문화권(북구 중외공원 일대)이다.

문화전당을 축으로 한 문화전당권에는 예술인 공방거리, 아시아음식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 사직동과 양림동 일대에 조성되는 아시아문화교류권에는 문화예술인·인권활동가 체류활동지원센터, 향토예술체험을 위한 공방거리, 아시아음악타운이 들어선다.

광산구 비아동 일대는 아시아 문화가 지니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연구·발굴하기 위한 아시아 지식연구소, 아시아의 학연구소가 들어선다.

아시아전승문화권인 남구 대촌·철석동 일대에는 아시아 전승놀이·설화테마파크, 아

시 전승문화공연장, 아시아 전승문화아카데미 등이 조성된다.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은 무등산, 광주호 및 영산·황룡강 일대를 거점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체험공간 위주로 구성된다. 이 일대에는 생태문화공원, 아시아자연문화연구센터, 친환경 생태·예술 시범단지, 영산강 하천습지생태원 등이 세워진다. 서구 마북동 공군탄약고 부지 일대는 교육문화권으로 개발된다. 대표적인 시설은 에듀파크, 에듀컬처 시범학교, 각종 교육·연구시설 등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광주시는 정부에 내년 7대 문화권 사업을 위해 모두 13건 212억원을 요청했지만, 100억원이 1차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됐다. 2차 심의에 7건 73억원이 상정됐지만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6건 61억4천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조5천억원에 달하는 7대 문화권 사업비가 제 때 투입되지 못해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7대 문화권에 들어서는 20여개 시설의 운영문제도 난제 가운데 하나다. 광주시의 재정형편상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이다.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7대 문화권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사업 규모도 크다"며 "문화중심도시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대인시장에 예술인공방거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문화인프라 확충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 문화수도 7대 문화권

F1 특별법 다시 힘받나

국회의원 79명 대회 지원 법률 재발의

전남도가 추진 중인 포틀러인(F1)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재발의됐다.

20일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한나라당 38명, 민주당 35명,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각 1명,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 4명 등 총 79명의 국회의원이 이날 '포틀러인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17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F1 대회 지원법이 다시 발의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도 F1 대회 지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F1 대회 운영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한 것이 특징. 당시 법안에는 대회 운영기업이 F1 대회의 추진 주체가 됐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문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정부가 대회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회운영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자본의 43%를 전남도 및 전남개발공사,

15%를 농협 등 금융기관, 23%를 개발시행건설사인 SK가 각각 소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회 관련 시설사업의 시행을 17대 국회에서는 대회 운영기업에 맡겼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전남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운영기업·시장·군수·공공기관·지방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17대 국회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대회 관련 시설사업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회 개최권료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전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19일 여야합의로 국회 내에 구성기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의 공식 의제로 F1 대회가 인천아시아게임 및 대구 육상경기 등과 함께 포함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지원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이번 F1 지원법 재발의에 앞장선 유 의원은 "F1 대회 지원법은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법적 제척 취지에 대해 공감을 얻어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지원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문화수도 사업 APA 소개

(아시아의회총회)

김성곤 의원 APA 문화 다양성 소위서 홍보

APA(Asian Parliament Assembly, 아시아의회총회) 문화다양성 소위원회에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소개된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21일 서울 워커히(W) 호텔에서 열리는 APA 문화다양성 위원회 회의에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홍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하는 각국 대표 발언에 앞서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며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시아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존중'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화의 문화적 도전과제, 문화다양성과 경제개발, 문화재 밀반출 근절



등 모두 8개의 소주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중장기적 전략 및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소개가 주제와도 상통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날 참석하는 외국 대표단은 아프가니스탄·바레인·사이프러스·요르단·쿠웨이트·시리아·이란 등 7개국의 15인이어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해외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가소득안정 특별법 제정해야"

전남도 농정 장·단기 과제 20건 발굴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을 비롯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농정 장·단기 과제를 발굴, 농촌 자치단체를 대표해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0일,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농정에 반영해야 할 장·단기 과제 4대 분야 20건을 발굴해 청와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의 경우 농가소득안정특별법과 농기자재 가격안정기금법 제정, 배합사료안정기금 5조 원 조성, 친환경농자재관리법 제정 등을 포함시켰다.

또 '농업인 복지 분야'에는 농업인

전문병원 건립 운영, 지방교부세법에 복지교부세 항목 등이 반영됐으며 '농어촌 교육 분야'에는 농촌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전남 실정에 맞는 특성화 교육대학 설립, 대입전형에 지역균형선발제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그동안 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인 단체가 전남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사료 값 인상 억제 대책, 면세유 가격 인하 및 공급량 확대, 학교급식센터 설치 등도 건의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월세 세입자도 소득공제를"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특별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 또는 사글세로 임대한 경우 그 비용의 40%를 소득공제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월세 및 사글세 세입자 수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천589만 가구의 약 20%에 달하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